

주택정책→‘주거문화’ 정책으로 개선 시급

기사입력 2021-04-26 08:05:39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에서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거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축계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정책이 계속되고 있지만, 더 나은 공간을 위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3일 건축공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정책에서 주거문화정책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박소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주거라 하면 흔히 부동산과 투기로 연결되지만, 최근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주거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축공간연구원 개원 목표인 ‘모두의 건축, 더 나은 도시’와 같이 부동산을 넘어 주거문화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공간복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거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는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영등포 쪽방촌 개발 등에서 새로운 주거정책의 가능성을 엿봤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주도해 쪽방촌 주민의 재정착을 돕는 영등포 쪽방촌의 사례가 재개발·재건축 방향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소장은 “주거 정책은 부동산 정책에 갇힌 채 앞뒤로 왔다갔다 할 뿐,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거정책을 전환하려면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포용·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 주거공간’ 발제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획일적인 주거 공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 문화의 다양성은 부동산 가격 차이로만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고층 위주의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다름과 차이의 가치를 인정하는 공간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공간을 중심에 배치하고, 계층·세대 간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는 도시·건축 디자인 방안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삶을 담아내는 주거문화와 주거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기후변화, 뉴노멀 시대 대응하는 주거지 기준 △지역, 장소 여건에 따른 주거정책 △수요 계층을 고려한 주거지 조성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정주 여건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삶터가 일터이자 놀터로 변하는 중심에 있다”며 “누구나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영욱 세종대학교 교수, 조항만 서울대학교 교수, 이규인 아주대학교 교수, 남철관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 국장,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진 토론에는 이규인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항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남철관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 국장이 참석했다.

조항만 교수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실제 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사례가 문제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남철관 국장은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고층개발과 저밀개발, 임대와 분양 등 주거문화의 여러 요소를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건축 △이웃이 있는 건축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축 △마을과 순환경제가 있는 건축 △수요자가 참여하는 건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동필 연구위원은 최근 주거정책이 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다양한 계층에 맞는 주거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간마다 사회적 관계가 다르고, 이에 따라 문화가 다양하게 형성됨에 따라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하은기자 haeunlee@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